흔들리는 靑 공직 기강 내부 쇄신 목소리 커져

연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 비위 의혹

연일 불거지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 비위 의혹에 청와대 공직 기강 해이 문제가 사실상 임계치에 달한 듯 하다.

야권은 '조국 책임론'에 화력을 집중하며 전선을 확장하는 모양새다. 청와대와 여권 일부에서는 내부 쇄신에 대한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이 연일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감반원 김모씨의 지인 수사 개입 의혹이 도화선이 돼, 이제는 민정수석실 전체 특감반원으로까지 추가 비위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언론에서 추가 혐의 의혹이 제기되면 그 사안마다 대응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방식이 더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김씨 비위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다른 특감반원들의 추가 비위 혐의를 적발하게 됐고, 청와대는 이들 전원을 소속 부처로 복귀시키는 조치를 단행했다. 다만 추가 비위 혐의에 대해서 소속청의 소관이라는 이유로 침묵할 뿐이었다.

그러나 이후, 논란의 불씨는 더 확대되는 듯 했다. 김씨와 다른 특감반원들이 부적절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것이다. 아울러 이 중에는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원뿐 아니라, 민정비서관실 등도 포함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게다가 논란의 김씨는 재직 시절 감찰기관 승진 전입 시도를 한 것도 추가로 드러나면서 청와대 내부 자정 능력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커졌다.

경호처 직원 음주폭행, 김종천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에 잇따라 터진 이번 사태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국정운영의 최대 악재로 부상하고 있다. 게다 야권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를 두고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서는 이제는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 상태로는 조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며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해외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도 현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순방지인 뉴질랜드로 떠나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내에서 많은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믿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나라, 국민들의 염원을 꼭 이뤄내겠다고 다시한번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집권 이후,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기조 아래 권력형 적폐 청산 작업에 주력해 왔다. 이날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번 사태에 대한 불편한 기색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특히 '믿어 달라'는 의미 심장한 표현이 귀국 후 대대적인 쇄신을 예고한 것 아니겠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돌아오시면 총체적인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지시가 있지 않겠느냐"며 "내부에서도 악재로 판단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비위 적발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의 '깜깜이'식 대응 방침에 대해 비판도 제기한다. 청와대는 감찰 사안은 비공개라는 이유 하에, 특감반 '전원 교체'라는 초강수 카드를 빼들었다. 그러나 정작, 어떤 추가 비위 혐의인지는 밝히지 않았던 것이, 각종 의혹이 증폭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청와대와 여권 안팎에서도 이를 두고 아쉬운 목소리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민정수석실과 대변인실에서 논란의 증폭을 막기 위해 최대한 긴밀히 조율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응방식을 두고 아쉬움이 없지 않다고 말할 순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여권 관계자는 "오히려 사안마다 대응방식이 더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야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비아냥거리며 조 수석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 즉시 인사 참사, 국정기강 해이의 직접 책임자인 조국 수석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조 수석은 대통령을 위해 책임지고 당장 사임하라"고 요청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지역공감.미래창조.정론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김병준 "당내 계파갈등 심각하지 않아…며칠 두고 볼 것"

"일부 일탈 행위 있지만 다들 조심하고 있어"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내 계파 정치 타파를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구상 '폴리틱스'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당내 계파 갈등이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는 것과 관련, "지금 계파주의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다소 관망하는 태도를 취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일탈적인 행위가 조금씩 보이고 있지만 다들 조심하고 있으니 며칠 간 두고 보자"며 이같이 말했다.

당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친박계(친박근혜)와 비박계(비박근혜) 간 계파 갈등으로 잡음이 흘러나오는 데 대해서도 "제가 계파를 자극하여 표를 얻는 행위를 여러차례 경고했고 나름대로 지도를 하고 있다"며 크게 우려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계파 청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 대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세부적인 개혁 작업들이 이런 (계파 청산을 위한) 맥락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그 다음에 공천제도 변화나 당원들의 권리신장 등 계파주의를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을 녹여내야 한다"고 말했다.

비박계의 수장으로 불리는 김무성 전 한국당 대표가 친박계를 대표하는 최경환 전 의원이 수감 중인 구치소를 찾아가 '통합'에 대해 논의한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우려감도 함께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과거에 계파를 달리했던 분들이 만나는 것을 계파청산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그런 분들이 똘똘 뭉치는 통합이 되어선 안 된다. 계파가 청산되고 그 속에서 의원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체제가 전제돼야 한다"며 계파 청산을 주문했다.

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김영우 의원이 비대위에서 선거일정을 확정하지 않아 '깜깜이 선거'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당규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예산안 통과 등의 문제가 있어서 그 상황을 보고 있다. 기본적으로 당규가 정한 규정을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나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이학재 탈당 임박한 듯…바른미래 '술렁'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복당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다른 바른미래당 의원들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면서 보수진영 재편이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한국당 복귀에 사실상 마음을 굳히고, 조만간 치러질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이후로 바른미래당 탈당 및 한국당 복당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바른미래당의 정체성 문제, 보수통합 문제 등을 두고 당 안팎 인사들과 논하며 한국당 복당 여부를 고심해오다 혼자라도 움직이자는 쪽으로 결심이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바른정당 시절에도 탈당을 고민하다 최종 잔류를 결정했었다.

이 의원이 한국당 복당의 '스타트'를 끊으면 다른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도 탈당 대열에 가세할지 주목된다. 다만 당장 무더기 탈당 사태가 일어날지에는 의문 부호가 붙는다. 당 한 관계자는 "야권이 보수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한국당 상황에 변수가 많은 데 서둘러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이) 여러 고민을 하고 있겠으나 쉽게 탈당하진 않을 것이다.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며 이 의원의 탈당설을 일축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의 정체성 논란이 이어지는 한 이같은 갈등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전 대표도 지난달 30일 연세대 강연에서 "개혁 보수의 길을 진짜 가고 싶은데 바른미래당 안에서 지금 얼마나 이뤄질 수 있을지는 늘 불안하다"고 밝혔다.

"文, 정상회담은 안타(安打) 김정은, 답방으로 홈런쳐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일 G20에 참가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에 대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타를 쳤다. 짧은 회담이었지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했다.

박 의원은 2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해서 문 대통령이 친 안타를 홈런으로 만들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북미 고위급 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향한 큰 실천으로 나아가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청와대가 '김정은 위원장 연내 답방 및 한미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과 연계, 또는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 '외국 정부의 승인을 받을 사안이 아니다'라고 똑부러지게 말한 것도 참 잘 한 일"이라고 부연했다.